

大學改革, 이렇게 하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改革의 방향과 과제 —개혁의 2A 접근과 2R 접근—

李 鉉 清

(大教協 高等教育研究所長)

1. 序 言

大學은 최초의 設立 당시부터 개혁과 변환의 노력을 해왔다. 규모 면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체계(system)와 체계(structure) 면에서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과 커리큘럼, 행·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大學改革이 國家的 관심사로 대두되고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통적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근간의 일이다. 우선 大學改革의 方向과 課題를 논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번의 大學改革은 기존의 改革과 어떻게 달라야 되며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둘째는 大學改革의範圍와 限界 그리고 速度와 관련된 것으로서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스케줄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는 大學改革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우선순위가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개혁에 대한 의문이다.

비단 사회체제로서의 대학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社會變動(social change)에 있어서 조차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질 때는 當爲性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大學改革에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본질적인 질문으로서 “파연 革命(revolution)이냐, 改革(reform)이냐?”이다.

大學教育協議會의 입장에서 대학에 대한 변화의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教育革命의어야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용한 改革이 되어야 하는 2R 접근(2R approach)과, 自律(autonomy)과 資務(accountability)가 동시에 고려되는 2A 접근에 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개혁은 사회체제로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와 과정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어느 국가든 大學教育의 改革 없이는 ‘유토피아적 21세기’(utopian 21 century)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大學改革의 방향

대학개혁의 기본방향은 대학의 자율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개혁의 기본방향은 최소한의

통제와 최대의 탄력적 운영, 그리고 최대한의 사회적 책임성의 제고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개혁은 ① 대학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 ② 대학의 다양한 발전 유도, ③ 대학 자율조정기구의 역할 강화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大學改革의 制度的 定着을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학개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自律과 責務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대학개혁의 기본철학은 6 가지 目標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학개혁의 기본 철학으로서는 ‘社會에 대한 義務’ 전반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체제로서의 대학의 효율성 신장과도 관련된다.

첫째는 自律性 伸張이다. 둘째는 卓越性 提高이다. 셋째는 責務性의 確立이다. 넷째는 多樣性의 極大化이다. 다섯째는 大學의 開放化이다. 여섯째는 大學의 効率性을 極大化하는 일이다.

특히 대학은 통제와 규율하기 위한 체제는 아니며 創造하고 產生하며 협력하기 위한 사회 체제이며 국가의 산업과 국력 신장의 ‘기능기제’(functional mechanism)이기 때문에 개혁의 기본철학은 위에 제시된 6 영역에 터해 실천적인 자율을 누리면서 책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 大學教育의 自律性 신장

大學教育의 改革方向은 그 본질에 있어서 自律性的 신장에 두어야 한다. 특히 21세기의 大學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대학개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자율성의 방향은 ‘과정적 자율’(process autonomy)과 ‘구조적 자율’(structural autonomy)에 두어야 한다. 大學教育協議會의 대학개혁에 대한 방향도 다분히 大學과 政府, 理事會와 大學總長, 大學體制와 大學體系 간의 자율화 방안에 관한 조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自律化的 方案으로서는 조직에 관한 사항, 人事에 관한 사항, 참고법령과 관련된 권한사항, 학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총학장 권한 또는 수임사항, 그리고 법정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大學 自律化 방안은 責務를 전제로 한

자율화의 원칙에 입각해서 개혁방향이 설정되고 있으며, 사회적 특성과 변화에 입각한 相對的 自律性(relative autonomy)에 더해 있다.

대학에서의 자율성은 脫制度化的 관점이나 超規範的 樣態에서 논의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이 대학의 기본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외적인 자율성을 의미한다. 절대적 자율성 아니면 아니된다는 절대논리가 아닌 제도 속에서의 자율성, 大學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점에서의 자율성이 기본 방향이다.

自律이 신장된 大學社會는 회일성의 특성을 탈피할 수 없으며 다양성의 관점에서도 多樣性 伸張이 어려운 설정이다. 더구나 構造的 特性에 따른 構造的 機能分化와 過程的 유연성의 관점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경영과 자율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Kerr(1991)가 주장하듯 “자율은 인간의 문제이지 제도와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설명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제도 어떤 구조이든 인간의 ‘자율적 의지’(autonomous will)가 결여된 경우에는 制度의 공동화 현상과 과정적 방임만 있을 뿐 인간이 주도하는 大學의 自律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서 大學教育協議會의 自律化 方向은 法制度의 측면에서의 구조적 제도적 자율화뿐 아니라 大學構成員들의 大學行爲(college behavior)에서의 자율화도 염두에 둘 것이다. 물론 自律화를 改革의 方向으로 인식하지만, 자율화에는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그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自律의 前提로서는 진실성, 성실성, 강력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相對性과 自治的 責務性를 전제로 한 사회에 대한 의무 그리고 優理性를 바탕으로 한 改革性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율의 기본전제 위에서 대학 자율화의 방향과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2) 大學教育의 卓越性 제고

대학교육은 ‘과거의 눈’과 ‘미래의 눈’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創造와 再生産의 기능을 수행한다. 再生産의 機能이 기존의 체제와 구조 그리고 가치 등을 전수하고 존속 유지시켜야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면 創造는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진보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은 탁월성 제고에 있다. 탁월성(excellence)은 ‘기능하는 인간’, ‘기능하는 대학’, ‘기능하는 사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어진 대학체제와 체계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때 부여될 수 있는 의미이다. 이때 대학교육에서의 탁월성은 ‘교육의 質’(quality)에 있으며 교수과정, 교수의 결과, 그리고 교육내용 등이 교육목표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면에 있어서도 적절성과 다양성이 유지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 大學教育協議會에서는 이러한 대학교육의 개혁방안으로서 大學評價認定制(college accreditation & reaccreditation system)를 도입하여 대학의 질관리에 기여토록 하고 대학교육에서의 탁월성을 제고하는 촉진기제(facilitating mechanism)로서의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물론 대학종합평가인정제나 학과평가인정제가 단순히 탁월성 신장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평가의 教育課業(educational task)을 점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대학교육에서의 탁월성을 위한 노력은 대학평가인정제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시설확보, 행·재정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教授의 質管理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합리화의 방안도 개혁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3) 責務性의 확립

대학개혁의 기본접근방법은 자율성과 책무성의 양대 과제라고 전제하고 2A 접근(책무와 자율)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학에서 자율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이 없는 대학은 ‘침묵하는 학위수여공장’(silent diploma mills)에 불과하며 책무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친자율은 ‘무정부적 학위수여공장’(anarchistic diploma mills)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大學改革의 基本方向은 自律과 責務의 두 축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특히 책무성은 무정부적 방만성을 초래키 쉬운 무분별한 자율에 대한 자기통제 속에서만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에 대한 책임, 대학내에서 수반될 수 있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사회에 대한 기능은 문화전달 및 창조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 선발 및 분배의 기능, 그리고 진보 및 혁신의 기능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수행을 통해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의 교육적 욕구에 부합시킬 수 있을 때 大學教育의 社會的 責務性은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大學改革은 大學이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大學教育의 責務性은 자율을 신장함으로써 증대될 수 있으며 자율의 신장은 책무성의 관점에서 그 범위와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학개혁의 주요한 영역의 하나는 대학이 사회·국가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구현에 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책임구현은 사회·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人 力培養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主體性 있는 大學人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하겠으나,個人이나 教育機關의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사회·국가에 책임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책무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道德的으로 機能하는 인간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과정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윤리성과 대학인의 책무성, 그리고 교육내용과 질차에서 질이 관리되고 적합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는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는 教育目標, 教育課程 그리고 教授 및 學習이 이루어질 수 있는 改革과, 이러한 교수행위와 학습행위에 관여된 大學環境과 大學構成員들이 社會的 責務性을 구현할 수 있는 개선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4) 大學教育의 多樣化

우리나라 대학교육개혁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大學教育의 多樣화이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중에서 고질적인 현상의 하나는 획일화, 표준화, 정형화 그리고 고착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학의 규모나 학생수 그리고 학과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커리큘럼, 학사일정, 입학과 졸업, 학과운영 그리고 학교체제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대학이 지역이나 학과편성 그리고 규모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모든 대학들이 綜合大學化的 모델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더구나 문제시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特定大學의 모방에 치우쳐 있거나 심지어 특정 '先導大學從屬化現象'마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多樣化社會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다양화사회의 특성은 대학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1세기의 대학은 '3C 시대'에 적합하게 될 것이므로 대학교육의 다양화는 주요한 개혁과제가 아닐 수 없다. '3C'란 고객개념(Client concept), 고객중심 커리큘럼(Customized curriculum), 그리고 고객중심 학교체제(Client-centered system)로서 모두 다양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커리큘럼이나 학교체제에 있어서 다양화되지 아니한 대학은 21세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낙후성을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大學人口가 감소되고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마저 채우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감안할 때 大學教育의 機能에 따른 分化와 役割定立의 과제는 앞으로의 대학개혁의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더구나 UR에 의한 高等教育의 開放을 눈 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관련된 과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大學教育協議會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연구수행과 다각도의 검토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대학교육 개혁의 주요과제로 인식하여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이다. 물론 대학교육의 다양화는 체계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규모의 측면이나 學科의 편성, 理工系와 人文社會系의 배치, 그리고 大學教育 目的과 學生構成 등에 있어서도 특성을 지닐 때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다양화는 大學의 規模와 設立目的, 그리고 特性화를 겨냥한 커리큘럼, 學生構成의 特

性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의 다양화이다. 이러한 예로 거점중심대학, 특성화대학, 기능적 특성대학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된 개혁은 構造와 機能의 양 측면에서 새로운 검토와 모델제시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연구들이 주요 개혁의 방향이 될 것이다.

5) 大學의 開放化

대학은 사회체제 중에서도 開放體制(open system)에 해당한다. 개방체제는 투입과 산출, 그리고 환류(throughput)의 과정에 있어서 개방된 특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개방의 의미는 체제의 개방이라 할 수 있는 입학과 졸업, 그리고 편·입학 등에 있어서의 개방적 특성을 의미한다. 대학의 개방화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체제와 과정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입학과 졸업 그리고 편·입학이 자유롭고 유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사운영 전반, 대학 행·재정관리 차원, 대학행정체제 그리고 학생지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개방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개방화는 자율화와 책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율화의 폭과 개방화의 폭은 엇물려 있다. 따라서 개방화는 자율화의 추진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혁내용이다. 自律化 없이는 開放化가 어렵고 개방화는 責務性을 전제로 한다.

물론 개방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자율화를 염두에 둔 개념이므로 大學教育協議會에서는 自律化의 大前提에 따라 開放化는 자율화가 된 대학이 스스로 단행할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개혁과제로 설정할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의 개방화는 대학교육을 外國의 高等教育市場에 개방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 때 개방화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육쇄국주의'나 '교육식민지주의'의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방향에서 준비하며 개방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國內的으로는 개방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생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유연성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國際的으로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도 있고 영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자유경쟁체제에 의

한 大學教育의 質管理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점에서 개방화 과제 또한 개혁의 주요 영역이 될 것이며, 그 추진 방향은 다양성과 탁월성의 전제 위에서 행·재정체제는 물론이고 학사 관리운영 등의 측면에서도 개방화가 장려될 것이다.

특히 개방화의 大前提은 '3S', 즉 학자(scholar)의 개방, 학생(student)의 개방, 그리고 체제(system)의 개방이 전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대학 성공의 관건은 자율과 개방화에 달려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自由競爭時代가 도래하게 되고, 개방화의 여부가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大學의 効率性의 극대화

흔히 대학개혁을 논할 때면 으레 대학의 효율성에 관한 쟁점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학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할 때 대학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문제가 배제될 수는 없다.

大學의 効率性은 일반적으로 教育投資와 教育結果 등의 관점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大學의 行·財政의 측면에서의 관리능력과 관련된다 하겠다. 대학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근간 등장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대학을 행정적 측면에서 설명하던 관점에서 경영(management)의 측면이나 관리제어(governance) 측면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大學經營은 단순한 업무수행이나 행정적 조치의 차원을 넘어서 관리하고 統整하며 助成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효율성(efficiency)의 문제이다.

대학개혁의 바람직한 방안 중의 하나는 대학들이 한정된 상황과 조건에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다. 이 때 관건이 되는 것이 교육지도자(educational leadership)의 문제이다. 教育指導者는 교육산업의 경영자이자 교육 여건의 조성자이면서 동시에 대학체제의 조망자이다. 대학의 효율성을 선장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내용과 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대학개혁의 방향은 대학체제의 조직에 관련된 사항과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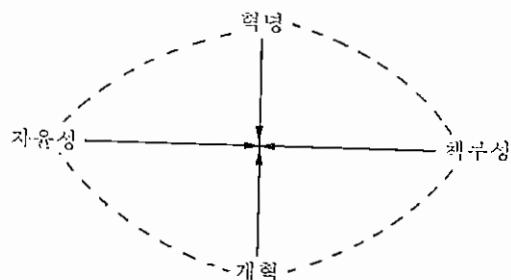
학사, 그리고 재정 등 총학장 권한은 물론 행정 체제와 의사결정과정 및 절차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의 효율성은 행·재정 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련되어 있고 人的物的過程에 관련된다. 이 점에서 대학개혁의 방향은 대학에 대한 회일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大學別特性과 與件에 부합되는 다양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효율성 극대화의 방향제시를 위해 중간 기구의 역할확대를 위한 개혁방안도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중간기구의 역할확대를 통해 相互協力과 自律的統制力量을 배양함으로써 大學運營體制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3. 大學改革의 방안

大學改革의 바람직한 방안은 앞서 논의한 6대 원칙에 부합되고 자율과 책무를 기본축으로 하는 2A 접근이 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혁명적 개혁과 현재의 구조적 틀 속에서 합리적 방안과 효율적 방안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개혁 등 2R 접근이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개혁의 기본틀은 수직적 수평적 통합형태가 바람직하다(<그림 1> 참조).

즉, 수직적 관점에서는 교육혁명적인 변화와 함께 단순한 재조정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수평적 관점에서는 자율성과 책무성의 양축에 의한 개방화, 탁월성, 다양성 그리고 효율성에 관한 개혁내용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바람직한 개혁은 수평과 수직이 조화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개혁의 내용들을 열거하



<그림 1> 대학개혁의 기본틀

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종합평가인정제와 학과평가인정제를 통한 대학질관리와 함께 자율화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② 대학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大學의 自律的인 發展과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 조성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③ 대학에 대한 회일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大學別 特性과 情件에 따라 다양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④ 大學의 自律化를 전제로 대학간 상호협력과 자율적 통제, 그리고 교육자원 공동활용과 교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다.

⑤ 대학개혁의 주요 내용은 대학행정체제의 자율화, 대학재정 운영의 자율화, 대학학사운영의 자율화, 교수와 학생의 역할, 그리고 대학의 기능과 역할정립 등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혁내용을 예시해 보면 대학관리 운영조직의 개혁, 교수채임 용제 개혁, 사립대학 국고조성제도의 법제화, 교직원 임용권의 개선, 학위의 종별에 관한 규정 폐지, 학점배분 기준, 학점계산 등의 대학 자율권 인정, 대학입학 방법의 학적 위임, 사학보조금 배분권 위탁, 학교법인의 회계에 대한 통제 완화, 사립학교에 대한 보고 징수 등의 제한, 학적에 대한 포괄적 인가권 폐지, 학교법인보고 징수권의 제한, 그리고 대학학생정원체정권의 개혁 등이다.

⑥ 대학개혁의 또다른 내용은 UR에 대비한 고등교육개방과 관련된 부분이다. UR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부분은 대학의 기능분화와 다양화, 프로그램운영의 유연성, 그리고 대학의 개방화 등과 관련된 개혁내용이 될 것이다.

4. 結 論

大學教育의 改革은 制度와 過程의 개혁이라 하지만 제도와 과정에 관여된 教育行爲者들인 인간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人間의 改革은 결국 의식개혁이므로 구조적 개혁과 의식 개혁이 병행될 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대학교육의 개혁이 어려운 점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自律化의 관점도 커리큘럼, 학사과정, 행·재정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주체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결과지어지며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召命意識(calling)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와 대학 간, 재단과 총장간, 교수와 학생 간, 제도와 운영 간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대칭보완적 관계는 결국 인간의 의식적 관계라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大學教育基本方向도 제도적 개혁→과정적 개혁→인간 의식개혁 등의 力動的 關係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교육주체자의 의식개혁을 전제로 한 相對的自律性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大學教育改革은 제도와 제도 간의 합리적 조정과, 인간과 인간 간의 합의적 과정, 그리고 대학과 대학 간의 公共性 제고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改革이 없는 大學은 21세기를 맞이 할 수 없으며, 人間의 教育에 대한 올바른 신념이 없이는 밝은 21세기를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개혁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른 방향과 自律—卓越—開放—貢獻의 수직·수평적 조합이 필수적 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